김영록 지사, 전남 핵심 현안 해결 '광폭행보'

김민석 총리·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
의대·석화철강산업 위기 극복 등 건의
'서남권 에너지혁신성장벨트' 구축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립의대 설립,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구축,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 등 지역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김민석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2027년 의대 정원 논의 시 의대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을 우선 배정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오랜 기간 유치 노력을 펼쳐온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는 대한민국 유치 선포와 함께,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을 개최 도시로 먼저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인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신속한 결정 처리를 위해 중앙위원회의 인력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남도 핵심 사업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또한 해상풍력·태양광 등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전남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를 구축해 RE100산단 등 미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만나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미국 관세 충격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고용위기지역(여수)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광양) 지정과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친환경 공정혁신과 산업 대전환 등을 건의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구축'과 관련, 석유화학·철강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단'으로 신속히 추진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극한호우와 폭염 등 빈번한 자연재난의 현실적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원 이상 피해 지역에 대한 국고 50% 지원과, 현행 최대 50%인 농축어업 재해보험료 할증률을 10%로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미래 먹거리와 도민이 염원하는 핵심 현안 사업이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아래 신속히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3일엔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안도걸 기획분과 위원 등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우상호 정무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심층면담을 갖고 '전남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COP33 여수(남해안·남중권) 유치' 등 전남 미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집중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달 1일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 전남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의회 '예결위' 새로 짠다

14일 임시회서 9명→8명 축소
상임위별 2명 배정 원칙 유지
부족시 타 상임위 충원 가능성
민주당 징계 여부 '변수' 우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논란으로 사상 초유의 예결위원 '총사퇴' 파행을 빚은 광주시의회가 오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예결위를 재구성한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총회를 열어 예결위 재구성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기존 9명 체제에서 의장 추천 몫을 제외한 8명으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임위별 2명씩 배정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인원 부족 시 타 상임위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28일 제335회 임시회를 앞두고 예결위가 차질 없이 가동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사퇴한 4기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새롭게 구성될 예결위 위원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상임위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의 인원 부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전체 시의원 23명 중 민주당 의원 10명이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데다, 4기 윤리특위 위원 3명도 부적격 논란으로 사퇴한 상태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논란을 빚은 의원들을 전부 제외하면 예결위 배정 가능 인원은 1명뿐이다.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 역시 예결위 참여 가능 인원이 거의 없어 의장 추천 몫을 배제하는 결정에 무게가 실렸다.

무엇보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도 변수다.

윤리심판원 징계 대상자가 예결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향후 징계로 인한 사퇴나 재구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윤리심판원 조사 결과가 오는 14일 이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해당 의원들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주목된다.

시의회는 14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예결위 8명 구성안을 의결하고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결위 운영 혁신안도 논의된다. 예산안 증액·삭감 사유 공개, 서면질의 활성화,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예산 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신수정 시의회 의장은 "이달 말 임시회를 앞두고 예결위 재구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며 "무소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수기 의원은 "예결위 구성에 앞서 윤리심판원 징계 일정 등은 민주당 시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에 이병훈·김성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상설 특별위원회로 신설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이병훈 전 국회의원(광주)과 김성 장흥군수(전남)가 내정됐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인 서삼석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이병훈 전 의원, 김성 군수, 이원택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수석부위원장에 내정된 이병훈 전 의원은 행정관료(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21대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을 역임했다.

전남지역 수석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김성 군수는 재선으로 현재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병훈

김성

재선의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전북부지사와 청와대 자치발전 행정관을 지냈다.

호남발전특위는 광주·전남·전북 등 3개 광역 지역별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지자체장,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서삼석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단의 풍부한 입법·행정 경험과 전문성은 특위가 호남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CMYK